

# “활력 넘치는 전북경제 위해”

## 도, 미래 자동차시장 선점 위해 ‘투-트랙’ 전략 시행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기존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와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트랙 전략은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가동 중단에 따른 자동차산업 생태계 붕괴와 유실 위기에 놓여있는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순도비 9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먼저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동력전달, 새시, 제동, 현가, 차체 등 핵심부품의 고부가

가치화, 경량화 및 신시장 창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이다.

또한, 미래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핵심 전기전장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과제 공고를 통해 65건의 과제가 접수돼 평균 2.5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에 따라 부품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생산 품목 확대와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다하겠다”면서 “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신속히 완성되고,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 활력이 넘치는 전북경제를 만들어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활력제고와 도내 부품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히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이를 통해 친환경미래형자동차 부품 개발, 부품 전문기업 유치, 완성차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성 기자



구호 외치는 한·일 노동자들 한일 경제분쟁 관련 한·일 노동자 공동성명 기자회견이 21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일한민주노동자연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 시책 발굴 토론회 가져... 현장밀착형 지원 계획 수립

전북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심화 및 한·일, 미·중간 무역갈등 등에 따른 도내 생산 부진 확대와 내수 회복 지연 및 수출 감소에 대해 중소기업 체질개선과 활력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전북도는 지난 7월부터 기업지원 유관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종합기술원 등과 함께 발굴한 성장사다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디자인 역량 강화, 수출활력 제

고, 4차산업혁명 맞춤형 인력양성 등 4개 분야 18개 신규사업에 대해 도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밀착형 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신규시책 발굴 단계부터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현장에 반영되었을 때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도의 선제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좀 더 좋은 신규시책을 만들고자 하는 도·유관기관·중소기업의 의지가 모여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제논전장 김용일 대표는 “일본 수

출규제로 인해 의기소침 해질 수밖에 없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힘이 되는 자리였다”면서 “오늘 논의된 돌출기업 육성이나 선도기업과 협력사간 동반성장 지원,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등 좋은 신규시책들이 모두 사업화되어 도내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섭 기업지원과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중소기업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전라북도과 기업,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댄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결핵 퇴치 위한 민간공공협의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20일 도청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 민간기관(의료기관, 결핵협회,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공공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핵 사업을 협력하는 민간공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결핵은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하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서 감염되는 질병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전신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핵 발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 도 결핵환자 수는 1307명(신환자 1006명)으로 전국 3만3796명(신환자 2만1643명)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결핵관리사업 민간·공공협의회는 민간과 지자체가 모여 지역 여건에 맞는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민간공공협력사업(PPM) 참여 의료기관 외에도 결핵 관리가 필요한 민간공공협력사업 미참여 의료기관(non-PPM)이 참여해 결핵 관리의 질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전북도와 시·군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공공협력(PPM) 참여·미참여 의료기관이 함께 모여

결핵관리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결핵 환자 관리에 대하여 집중적인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결핵 관리의 질을 평가하고 적정성을 도모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공공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결핵 관리로 도민들이 결핵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결핵 퇴치에 힘쓰겠다”며 “평상시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키는 것이 결핵의 전파와 감염을 막는 첫걸음으로 올바른 기침예절은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가리지 않고,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 내일부터 미표시 달걀 판매 금지

전북도는 28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어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것으로 제도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이번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전면시행으로

달걀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농가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총 10자리가 표시되며, 10자리 표시사항은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란수집관매업자, 축산물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달걀

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산란일을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산란일 농가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게 되면 형사 고발 조치된다.

도 관계자는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와 달걀을 판매·취급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추석명절 부정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전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이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내 4890여 곳을 대상

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냉동고기를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한 산물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내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전통시장 등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산란

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하여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을 피해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되, 위반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업체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유동인구 급증 등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시군, 안전

관리자문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9월 6까지 실시해 보다 더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버스터미널 및 전통시장 합동점검은 인구밀집 2개분야 9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적극참여하여 추석 명절 기간에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개별법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현지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상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사안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집중 관리한다.

해당 분야별 관리부서 및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북도에서도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 행정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를 통한 민·관 합동 표본점검을 통하여 후시모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